

# “광주시체육회 잘못으로 회장 직무정지”...진통 장기화 우려



민선 첫 광주시체육회장의 중도 사퇴이후 치러진 보궐선거마저 '시체육회의 잘못'으로 회장의 직무가 중지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선 2개월여만에 직을 잃은 이상동 회장 측은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 “직무대행자 임명부터 규정 애매...재선거 불가” 이상동 회장 측 “이의신청 뒤 후속 소송도 고려”

것으로 알려져 주장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상동 회장의 직무가 지난 16일부터 정지돼 부회장 9명 중 1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할지, 연장자 순에 의해 대행자를 지명할 지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거친 뒤 지

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직무정지 기간을 '판결 최종 확정'까지로 명시해 당장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어 주장 공백상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낙선 후보들은 지난 5월13일 보궐선거 이후 곧바로 '무자격 대의원 선거 참여'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기준점 모호' '당선자 측의 사전선거운동' '선거인수 배정 규정위반' 등을 거

론하며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시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을 잘못 배정했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사전선거운동 등 나머지 3가지 의혹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 볼 때 선관위가 적어도 315명(종목단체 최소 210명·구체육회 최소 10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당선무효 확인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시체육회는 보궐선거에 참여할 대

의원을 282명으로 구성했으며 이 중 274명이 참여해 이상동 후보가 132표, 전갑수 후보 110표, 이강근 후보가 32표를 획득했다.

이상동 회장 측은 보궐선거를 관리했던 시체육회의 잘못으로 직을 유지할 수 없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안 소송과 더불어 시체육회 등을 상대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납부했던 출연금 반환,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상동 회장 측은 “개인적인 일탈

로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으면 받아들이겠는데 선거를 총괄했던 시체육회의 잘못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를 조속히 선임할 계획이다”며 “체육회의 잘못으로 문제가 불거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지난해 1월 민선 1기 김창준 회장이 당선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1년 2개월여만인 지난 3월 사임했다.

시체육회는 보궐선거를 곧바로 실시했으며 이상동 회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2023년 1월 까지이다.

이슬비기자



## 소방당국 온열질환 대응 강화

### 119구급차에 생리식염수·얼음조끼 등 준비

소방 당국이 온열질환자 대응을 강화한다. 올해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소방청은 온열질환자 급증에 대비해 구급 출동 태세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당국은 전국 모든 119구급차 1557대에 생리식염수, 얼음조끼(얼음팩), 정맥주사세트와 같은 폭염 대응 구급장비 9종을 준비한다.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상황실은 온열질환 응급의료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119구급차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평

불런스(구급활동을 지원하는 소방펌프차)에도 구급 장비를 마련했다.

119구급대 폭염 관련 출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는 폭염 특보가 가장 많았던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 8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7월27일~8월2일 31건, 8월3~9일 32건에 불과했던 온열질환 응급처치 환자 수는 8월10~16일 119명, 8월17~23일 161명, 8월24~30일 79명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19구급대가 응급처치한 전체 온열질환자 686명 중 72.6%인 496명은 낮 12시~오후 18시 사이에 발생했다. 184명(26.8%)은 바다·강·산·눈밭 등 야외에서 신고됐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부끄러운 민낯” 광주 북구의회, 30년史 편찬 파행

광주 북구의회가 개원 이래 활동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발전적 역할을 모색하고자 추진 중인 의회 30년사(史) 발간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4월30일 지역의 한 민간 연구단체 A사단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고 '30년사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1~8대 의회의 활동 경과와 성과를 되짚어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린 시행을 앞두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의회는 A사단법인과 '400여 쪽 안팎의 국배판 책자 50부, 편집 원고 전자문서(PDF·HWP파일) 등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 용역 예산으로는 구비 2130만 원이 쓰였다.

그러나 의회 내에선 '아예 안 한다'면 몰라도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이견이 나왔다. 문서고 보관, 업무 참조, 국회 도서관·북구청·의정동우회 등 유관기관 배포, 대민 홍보 등 수요를 고려할 때 200부는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2년에 1번 꼴로 나오는 북구의회 의정백서는 통상 150~200부를 제작한다.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해도 발간 부수·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예산 6000만 원을 들여 1000여 쪽 분량의 '30년사' 200여 부를 펴내기로 했다. 광주 시의회는 500부(500여 쪽 분량) 규모로 편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투입

### 전례·타 의회 비례 예산 과소편성...‘수의 계약 탕? 의혹 무성 용역업체 역량 미달·기존 연구 표절 의혹까지...기한도 연기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전경.

예산은 5000만 원이다. 두 의회 모두 외부위탁 평가까지 거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적정 규모보다도 지나치게 적은 예산이 투입된 배경을 놓고 설이 분분하다. 일각선 다른 의회와 달리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을 맺은 점과 연결지어 '누군가 밀어준 업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용역 추정가격 한도 22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맞춰 예산을 짰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북구의회는 향후 추정예산을 편성해 추가 발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의 계약 요건에 맞추려 예산을 일부러 쪼개기 아니냐는' 폄수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저예산 규모로 단독 낙찰을 받은 A사단법인의 역량·자질도 도마위에

올랐다.

과업지시서 상 '30년사' 성과물 제출 기한은 올해 6월30일까지였으나, 의회사무국은 A사단법인이 제출한 결과물을 반려하고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미뤘다. 내용 부실, 지나친 발췌, 무성의한 편집, 연구물 표절 의혹 등이 반려 이유였다.

계약·과업지시서에 따라 A사단법인은 ▲편찬 구성안 기획 ▲역대 의회사 연구 ▲원고 집필·편집·디자인 ▲검수·발행 ▲지방자치 발전 방향 학술 연구·제언 등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개괄, 역대의회 연혁·의정활동 등이 담긴 1·2장은 의회사무국이 소장 중인 1차 사료를 넘겨 받아 그대로 베꼈다.

더욱이 3장(의회 성과·과제 등 평가), 4장(미래 발전방안 제시) 등에 수록된 내용은 학위 논문, 학술대회 자료집, 수 쪽 분량의 연구 논고 등 기존

연구기록물의 상당 내용을 발췌, 짜깁기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는 기존 연구내용 중 주어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북구의회'로 바꾼 수준의 '표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급기야 의회는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A사단법인 대표 격인 모 교수를 불러 결과물 개선을 독려하기도 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수정 보완 사항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안고쳐진 부분도 많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이걸 다시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 “성의 문제 아니냐는 이야기도 계속 나온다”라고 질책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발췌·표절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의 역사를 (쓰는 일이)고 전액 삭감 위기에서 되살렸을 정도로 심사숙고한 예산이다”며 “애초 ‘중액해 제대로 된 틀을 만들자’고 했다던 협조했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여러 의견을 최종 제출 결과물에 반영하겠다. 특히 여기저기 문헌들을 좀 참고해서 발전 방안을 제시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의회사 발간물은 과거사 집대성뿐 아니라, 평가와 전망을 담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자치·의정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면서 “부끄러운 지방자치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협세를 낭비한 것이다. 주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선욱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

## 준솔루션